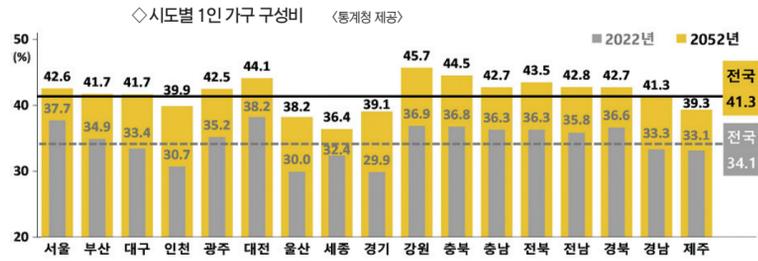


30년 후 광주·전남 10 가구 중 4가구 '1인가구'

전체 가구 수 각각 2037년 2041년 정점 찍고 하락세 전환 고령가구 급증...전남 60.1%·광주 47.5% 65세 이상 가구

30년 뒤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1인가구'일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출산율 저하, 혼인 감소 등으로 인구 수는 감소세에 접어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인 가구 수의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가구 수는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은 가구 수 증가 추세에 따라 각각 2037년과 2041년에 가구 수가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여 오는 2052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가구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1만 5000가구로 6000가구(1.0%)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1인가구 수는 21만 8000가구에서 26만 1000가구로 4만 3000가구(19.7%)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35.1%(2022년)에서 42.4%(2052년)로 증가할 전망이다. 두 집 건너 한 집 이상이 1인가구인 셈이다. 전남의 경우 총 가구 수와 1인가구 수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남지역의 총 가구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78만 2000가구, 2052년에는 80만 7000가구로 30년 새 2만 5000가구(3.2%)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전남의 1인가구 수는 28만 2000가구에서 34만 5000가구로 6만 3000가구(2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인가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평균 가구원 수도 오는 2052년에는 광주(2.26명→1.77명)과 전남(2.13명→1.67명)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모두 2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심화 등으로 60세 이상 고령가구도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통계청은 광주시 고령가구는 지난 2022년 기준 2만 9000가구에서 2052년 3만 4000가구로 5000

지역별 전체 가구 대비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남이 34.4%로 가장 높았고, 경북(31.5%), 전북(30.9%) 순으로 높았다. 광주는 21.1%로 전국 평균(24.1%)을 밑돌며 17개 시도 중 12위를 기록했다. 오는 2052년에도 전남 고령자 가구 비중은 60.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광주는 47.5%로 전국 평균(50.6%)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전남은 고령자 1인가구 비중 역시 2052년 기준 26.8%로 강원(27.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광주 역시 20.1%를 기록하는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고령자 1인가구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장래가구추계 자료는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및 인구총조사 결과와 최근 혼인·이혼·사망 등 인구동태 추세를 반영해 장래 가구규모와 가구유형 등을 전망한 결과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쌀 과잉생산 막는다...내년 벼 재배면적 11% 감축

농식품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감축면적 8만ha 시·도별 배정 "자급을 낮추고 수입쌀 확대" 반발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내년 벼 재배면적을 8만ha(헥타르:1ha는 1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대규모 감축은 오히려 국내산 쌀 자급률을 낮추고 수입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또 각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량이 많은 벼 품종보다 고품질 품종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신곡을 쓰는 기업에는 지급 지원 시 우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 정부의 쌀 구조개혁 대책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과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육성이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감축 면적 8만ha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가의 면적 감축을 유도하면서 감축 농가를 대

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가 목표로 한 감축 면적은 올해 벼 재배면적(69만 7685ha)의 11%에 달한다. 최근 3년 간 전국 벼 재배면적 감축 규모(3만 4384ha)보다도 2배 이상 많다. 올해 전남의 벼 재배 면적은 14만 7714ha의 절반이 넘는다. 전남의 벼 재배면적은 15만 5101ha(2021년)→15만 4359ha(2022년)→14만 9758ha(2023년) 등으로 줄었다. 면적이 줄면서 생산량도 78만 9650 t(2021년)→74만 2913 t(2022년)→73만 6985 t(2023년)으로 감소했다. 그래도 재배면적, 생산량 모두 전국 1위라는 점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의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농업 현장 분위기다. 정부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확대했고 하계 조사료와 밀은 내년 지급단가를 각각 ha당 70만원, 50만원씩 인상한다. 박형대(진보·장흥 1) 전남도 의원은 "당장, 내년

여름에는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강제적인 대규모 감축은 국내산 쌀 자급률을 낮춰 수입쌀 시장을 키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전문 단지(50~100ha)를 시·도별로 내년 한 곳씩 시범 운영하고, 2029년부터 2개소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 벼 재배면적도 오는 2029년까지 6만 8000ha로 확대하고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30% 감면구간을 신설하는 등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지역 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싱가포르 등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쌀 수출을 확대하고 식량원조를 올해 11만에서 내년 16만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쌀 산업 구조개혁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중인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내놓은 대안성 정책이지만 수입쌀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 농민들 반발이 불가피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벤처·ICT·SW 기업인의 밤' 행사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가 지난 11일 '2024 광주전남벤처기업인 및 ICT·SW 기업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이 공동 주최했다. 벤처 기업인들은 이날 행사에서 최근 국내외적 리스크 확대와 여전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 환경 속에서도 올해를 마감하고 2025년 도약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 성장, 활력 증진 등에 노력한 유공자 37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에 다운플레이스㈜

박주현 대표와 불팅마스타㈜ 박금준 대표, 아이티엘㈜ 조명섭 대표, ㈜에드업 강한 대표, ㈜전사푸드 하늘 대표가 선정됐으며, 광주광역시장 표창은 ㈜드림트리 윤선중 대표, 스마트 솔루션 서효석 대표, ㈜뉴넷 정주영 대표, ㈜스튜디오 필풍 이호 대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DX 융합팀 서승주 팀장,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택인 선임연구원이 수상했다. ㈜비온사이노베이터 김용수 대표,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고창진 책임,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김병재 선임은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련된 기초 발제와 세미나가 진행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신한은행과 지역 금융 발전 상생협력 업무협약

디지털 협업·소상공인 공동지원
광주은행이 12일 본점에서 신한은행과 지역 금융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 정성현 신한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전남지역의 인구감소와 내수 금융시장 축소 등 금융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은행간의 불필요한 과한 경쟁을 지양하는 등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시스템과 내부통제 등 금융업 전반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양 은행의 중복 비용 절감을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 공동 활용으로 금융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핵심 협력 분야로는 ▲디지털 협업 체계 구축▲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지역 내 취업 활성화 지원 ▲ 상호 이해를 통한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 3가지를 꼽았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양행이 필연적 협력을 지향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번 협약이 상생을 기조로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6조원...24조원 ↑

올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약 24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498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2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1.5%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은 293조 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 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가 6조 1000억원 늘었지만 저조한 기업실적 탓에 법인세

는 17조 9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24조 1000억원, 180조 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 5000억원, 16조 4000억원 늘었다. 10월 누계 총지출은 529조 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0.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 7000억원 적자였다. /연합뉴스

전남테크노파크, 화순군 스타기업 3곳 지정

글리제·수와루·두성이앤씨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산업센터와 화순군은 지난 11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스타기업 3개 사 ㈜글리제, ㈜수와루, ㈜두성이앤씨에 대한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화순군 스타기업은 창업 3년 이상, 매출 10억원 및 3년 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을 달성한 유망중소기업이다. 선정된 스타기업은 2027년까지 지정되며, 기술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 발굴을 통해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함이다. ㈜글리제는 전속작가 10여명이 창작 조형물(목재, 철재)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제조기업이고, ㈜수와루는 이동식 건축물(주택, 찜질방, 샤워장, 클린하우스)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두성이앤씨는 원격자동 강우량기, 재해문자 전광판 등 전자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다. 화순군 스타기업육성사업은 군내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최대 3년간 하

순군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스타기업이 지역경제를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화순군에 감사하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대표기업 육성에 큰 시너지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2.12 (+39.61)
↑ 코스닥	683.35 (+7.43)
↑ 금리(국고채 3년)	2.549 (+0.013)
↓ 환율(USD) (오후 5시 55분 기준)	1431.95 (-0.25)

전남도 제안 과기혁신사업 예산연계 후보 선정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
전남도가 제안한 '에너지 및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이 예산 연계 후보사업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 제5회 회의를 열고 '지자체 2026년 예산 연계 후보사업 선정결과'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지방협의회는 17개 시·도와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등이 참여해 지역과학기술 정책·사업 조정, 협업 과제 발굴·이행 등의 역할을 맡는다.

지방협의회는 이날 전남도를 비롯, 13개 지자체가 제안한 '2026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소관부처 검토를 거쳐 전남도 등 7개 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예산 연계 후보사업으로 선정했다. 예산 연계 후보사업은 검토 결과를 반영해 기획을 보완하고 자문 및 소관부처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열리는 제 6회 지방협의회에서 예산 연계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각 자치단체는 지역별 중장기 전략과 연계해 지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점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제안했다. 전남도의 경우 금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탄소

중립 및 분산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실증, 해상풍력 단지 조성 등 에너지 분야와 스마트팜·양식·기재·중자 등 생산기술 개발·실증 및 기자재 신뢰성 평가 기반 조성 등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제안했다. 전남도 이외 강원·경북·대구·대전·부산·충남 등이 선정됐다. 지방협의회는 또 광주·전남을 비롯, 비수도권 14개 시도 주력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인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사업은 적정성 검토 종료로 총사업비를 확정된 후 사업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역별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